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December 2025 Issue | Vol. 8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IMF, 일반적인 조세 사면에 부정적 입장... 필리핀의 재정 선택지 제시 — page 1
- 2026년 중반까지 사업 허가 규정 변경 없어 — page 2
- PEZA,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 목표 — page 2-3
- SEC의 새로운 실소유자 규정: 알아야 할 사항 — page 4-5
- 투자위원회, Lease법 시행규칙(IRR) 서명 — page 5
- 11월 무역적자 증가 가능성 — page 6
- 재무부, 납세증명서(LoA) 발급 권한 있는 국제청(BIR) 사무소 제한 가능성 — page 6-7

IMF, 일반적인 조세 사면에 부정적 입장... 필리핀의 재정 선택지 제시

December 25,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일반적인 조세 사면은 납세 순응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개선과 표적화된 정책 조치를 통한 조세 동원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필리핀 국가보고서에서 제안된 일반 조세

사면이 정기적인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낮출 수 있다며 “권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필리핀은 세수 확대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으며, 세입 기반 조치는 지출 조치에 비해 일반적으로 재정 승수가 더 낮다”고 밝혔다.

IMF는 부가가치세(VAT) 효율성 제고를 비롯해, 설탕이 함유된 음료, 혼합 주류, 영양가가 낮은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 등 다양한 조세 정책 선택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석탄, 일회용 플라스틱, 온라인 도박에 대한 소비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주거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범위를 축소하고, 농업·어업 부문에 대한 면세를 합리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조세 체계의 누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소득세와 관련해 IMF는 투자 및 비투자 인센티브를 간소화하고, 적격 국내 최소 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MF는 개인소득세 측면에서 13월 급여 및 기타 상여금에 적용되는 9만 페소 면세 기준과 의무적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납입금, 소액 복지혜택(minimis benefits)에 대한 면세를 합리화할 것을 조언했다.

IMF는 특히 최근 CREATE MORE 법을 통해 조세 인센티브가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조세 인센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간소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출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단위(LGU), 특히 바랑가이 수준에서 예산 편성·집행·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촉구했으며, 공무원 보수 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가 연금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군인·제복 공무원 연금에 기여형 제도를 도입하고, 현직 인력의 급여에 연동된 연금 인상 방식을 중단하는 것도 인건비 지출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세 조치가 없을 경우, IMF는 재정 건전화가 주로 지출 축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유리한 금리-성장률 격차에 힘입어 국가 정부 부채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2/25/imf-frowns-on-general-tax-amnesty-lists-fiscal-options-for-phl/>

2026년 중반까지 사업 허가 규정 변경 없어

December 26, 2025 | Logan Kal-El M. Zapanta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반관료주의청(Arta)은 기존의 사업 허가 및 인허가 절차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2026년 갱신 기간 동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주 발표된 권고문에서 Arta는 사업 허가와 관련된 기관들이 전자 원스톱 비즈니스 시스템(eBOSS) 준수에 있어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10일에 열린 협의회를 따른 결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지방정부 단위(LGU), 내무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소방청(Bureau of Fire Protection), 전국 사업 허가 및 인허가 담당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 Permits and Licensing Officers)가 포함된다.

Arta는 이번 결정이 특히 화재 안전 점검 수수료(FSIF) 처리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FSIF는 기업이 화재 안전 통과증(fire safety clearance)을 받고, 이후 사업 허가 및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GU는 FSIF 징수를 위해 기존 절차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요구 사항, 시스템 전환, 일방적 변경은 적용될 수 없다.

이미 화재 안전 점검 시스템(FSIS)으로 전환한 LGU는 FSIF의 평가, 징수, 송금에 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중단 없이 진행

Arta는 또한 LGU가 6개월 전환 기간 동안 처리 일정, 서비스 기준, 결제 방식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Arta는 2018년 기업활동 용이법(Ease of Doing Business Law)에 따른 비즈니스 거래 간소화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eBOSS 시행 공동 각서(joint memorandum circular) 변경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rta에 따르면 제안된 변경안에는 FSIS와 eBOSS 통합,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 관련 조항이 포함되며, 이는 국가 개인정보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와 협의해 개발될 예정이다.

개정안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점검 회의는 2026년 1분기에 예정되어 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6286/no-change-to-business-permit-rules-until-mid-2026](https://business.inquirer.net/566286/no-change-to-business-permit-rules-until-mid-2026)

PEZA,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 목표

December 26,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STOCK PHOTO | Image by Vitamin from Pixabay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내년에 삼성전자 필리핀 법인(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Corp.)의 510억 페소 규모 확장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한국을 주요 투자 유치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PEZA 테레소 O. 팡가(Tereso O. Panga) 청장은 BusinessWorld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가장 유망한 국가는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필리핀-한국 FTA와 SEMPHIL의 대규모 확장 덕분에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더 많은 한국 투자를 촉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었으며, 필리핀의 세 번째 양자 FTA다.

한편, SEMPHIL의 507억 페소 투자 프로젝트는 기업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법(CREATE Act)에 따라 대통령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PEZA는 내년 투자 약속 승인액을 3,000억 페소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승인한 프로젝트는 2,610억 페소 규모였다.

올해 승인액은 PEZA가 설정한 연간 목표 2,500억 페소를 초과했으며, 2015년 2,951억 페소 승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Cont. page 3]

PEZA,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 목표

[Cont. from page 2]

2025년 외국인 투자에서 일본이 최대 투자국으로 나타나 총 승인액 291억 6,900만 페소를 차지했다.

PEZA 테레소 O. 팡가(Tereso O. Panga) 청장은 “일본은 꾸준히 PEZA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국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SEMPHIL의 대규모 첨단 프로젝트로 인해 한국이 경제구역(ecozone) 투자에서 최대 투자국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5년에는 일본이 다시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은 3위로 밀렸다. 또한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중국, 미국 등에서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25년 케이맨 제도에서의 투자는 166억 9,400만 페소, 한국은 114억 6,000만 페소였다. 싱가포르, 중국, 미국에서의 투자액은 각각 111억 8,600만 페소, 67억 8,800만 페소, 62억 6,000만 페소였다.

상위 10위에는 홍콩(51억 1,200만 페소), 독일(44억 5,600만 페소), 호주(37억 1,800만 페소), 네덜란드(26억 7,400만 페소)가 포함됐다.

2024년 상위 5개국은 한국(512억 6,900만 페소), 일본(137억 3,600만 페소), 케이맨 제도(91억 1,600만 페소), 네덜란드(57억 2,600만 페소), 말레이시아(45억 5,500만 페소)였다.

12월 22일, PEZA 이사회는 총 투자비 236억 8,900만 페소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7건을 승인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3,821개의 일자리 창출과 13억 2백만 달러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월요일 이사회 회의 이후, PEZA는 올해 총 314건의 프로젝트, 총 투자액 2,608억 9,000만 페소를 승인했다.

승인된 프로젝트에는 제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물류, 유틸리티, 시설, 국내 시장 기업, 관광, 경제구역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올해 승인된 프로젝트는 총 78,741개의 일자리 창출과 115억 2,200만 달러의 수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PEZA가 올해 선포된 10개의 신규 경제구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맞춘 신규 경제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경제구역에는 타그빌라란 업타운 IT 허브 2, 리마 테크놀로지 파크 2개 확장, 더 어퍼 이스트, SM 시티 산타로사 IT 센터, 드 라 살 대학 혁신 허브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신규 경제구역에는 웨스트 세부 산업단지(West Cebu Industrial Estate), 8912 아세아나 애비뉴(8912 Aseana Avenue), 알코코 개발 산업단지(Allcoco Development Corp. Industrial Estate), 필인베스트 이노베이션 파크(Filinvest Innovation Park)가 포함된다.

PEZA 테레소 O. 팡가(Tereso O. Panga) 청장은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구역이 아직 14곳 있으며, 팔라완 이하위의 첫 메가 경제구역, 알바이 판타오의 태평양 관문 경제구역 등 대통령이 더 많은 경제구역을 선포함에 따라 PEZA의 투자 유입과 프로젝트 확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필리핀에서 공급망을 확장하고 통합하는 것의 가치를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개발연구소(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수석 연구원인 존 파울로 R. 리베라(John Paolo R. Rivera)는 경제구역 투자 실현은 일관된 인센티브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2026년까지 이러한 투자 유입을 지속하려면 일관된 인센티브, 신속한 프로젝트 실행,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베라는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강한 투자 관심조차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패로 인해 필리핀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베라는 이번 투자의 증가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기술 중심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다시 1위로 올라선 것은 제조업과 공급망 통합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반영하며, 한국의 투자 급증은 대규모 첨단 프로젝트와 자유무역협정(FTA)이 투자 순위를 빠르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 안정성, 무역협정, 복잡하고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단순한 투자 규모보다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2/26/721012/peza-eyes-more-investments-from-south-korea/>

SEC의 새로운 실소유자 규정: 알아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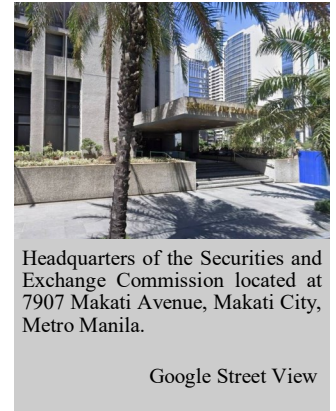
December 24, 2025 | Ian Laqui - Philstar.com

필리핀 마닐라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실질 소유자(BO) 공시의 정확성과 시기적절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SEC는 12월 23일 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제15호 메모랜덤 서클러(Memorandum Circular No. 15, Series of 2025)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2026년 BO 공시 규칙을 명시하고, BO 정보 제출과 관련된 기존 규정을 통합한 것이다.

프랜시스 림 SEC 위원장은 “실질 소유자 투명성 강화는 기업이 불법 활동에 악용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년 규칙은 기존 공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회가 구조화된 고품질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합법적 목적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시기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Headquarter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located at 7907 Makati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Google Street View

SE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업이 불법 활동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서클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칙에 따라 SEC는 BO 정보를 검증하고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검증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BO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관련 법률과 안전장치를 준수하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실질 소유권 보고 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세탁방지위원회(Anti-Money Laundering Council)가 발행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SEC에 따르면, 이번 규칙은 지명인(nominee) 보고를 의무화하고 실질 소유권 변경 사항을 적시에 통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시 요건을 강화한다.

이 규칙은 어떤 기관에 적용되나?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규칙은 SEC 관할 하의 국내외 법인, 파트너십, 1인 법인(OPC)을 포함하며, 관련 임원, 주주 및 기타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s)란 무엇인가?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질 소유자(BO)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실질 소유자 또는 실질 소유권이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계약, 합의, 이해관계, 관계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다음을 가지거나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첫째, 의결권 — 해당 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권한을 포함하며, 둘째, 투자 수익 또는 권한 — 해당 증권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지시할 권한을 포함한다.”

새 규칙에 따르면 실질 소유자는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과 다양한 형태의 통제 또는 영향력에 따라 “A부터 I까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A 카테고리에는 보고 대상 기업의 의결권, 의결 주식, 또는 자본을 “직접 또는 소유 구조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최소 20% 이상 소유한 자연인”을 포함한다.

SEC는 또한 기업들이 실질 소유자의 신원과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인물이 실질 소유자로 지정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필리핀 개정 법인법(Revised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에서 부여된 감독권(visitorial powers)을 행사하여, 이러한 신고와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 및 BO 등록

2026년 규정에 따르면, BO 등록을 위한 전용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며, 현재 전자 제출 시스템(eFAST)을 통한 데이터 제출 방식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새 시스템은 기존 공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등록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일반 정보 시트에서 BO 항목이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 시스템은 결국 웹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절차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eFAST와 통합된 상태를 유지한다.

기업들은 소유 구조가 변동이 없는 경우, BO 세부 사항 제출 대신 간소화된 연간 확인서(attestation)를 제출하게 된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공시를 보장할 책임은 국내 기업의 경우 법무담당자(corporate secretary)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외국 기업의 경우 상주 대리인(resident agent)에게, 1인 법인의 경우 주요 책임자(primary responsible party)에게 있다. [Cont. page 5]

SEC의 새로운 실소유자 규정: 알아야 할 사항

[Cont. from page 4]

제재 사항

SEC에 따르면, BO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유보 이익(retained earnings) 또는 기금 잔액(fund balance)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유보 이익이 50만 페소 미만인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는 첫 번째 위반 시 5만 페소, 네 번째 위반 시 최대 50만 페소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일한 기금 잔액을 가진 비주식회사(nonstock corporation)는 첫 번째 위반 시 2만 5천 페소, 네 번째 위반 시 최대 25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짓 BO 정보를 제출할 경우, 기업은 최대 200만 페소의 벌금과 해산 가능성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사, 신탁인(trustee), 임원이 BO 공시에 대해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5만 페소, 네 번째 위반 시 최대 10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거짓 신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있는 임원은 최대 10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받고, 향후 5년간 어떠한 법인의 이사, 신탁인, 임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사례: 등록 취소

SEC는 11월 26일 결의에서, 계약자 부부 커리(Curlee)와 사라 디스카야(Sarah Discaya)가 소유한 St. Timothy Construction Corp.와 St. Gerrard Construction General Contractor and Development Corp.의 법인 등록을 취소했다.

SEC에 따르면, 두 회사는 사라 디스카야가 실질 소유자임을 공시하지 않아 SEC 규칙을 위반했으며, 등록 취소 외에도 각 회사는 200만 페소의 벌금과 지속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으로 하루당 1,000 페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명령받았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2/24/2496508/what-know-about-secs-new-beneficial-ownership-rules>

투자위원회, Lease 법 시행규칙(IRR) 서명

December 25,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BoI)는 공화국법 제12252호(Republic Act No. 12252), 즉 99년 투자자 임대법(Investors' Lease Act)의 시행규칙(IRR)에 서명하며, 내년 새 규정 시행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마. 크리스티나 A. 로케(Ma. Cristina A. Roque) 무역부 장관 겸 BoI 위원장은 목요일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필리핀을 세계적인 투자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이번 서명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우리가 경쟁력 있고 기업 친화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BoI는 12월 19일 토지등록청(Land Registration Authority)과 함께 시행규칙(IRR)에 서명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사유지에 대한 임대 기간을 기존 75년에서 최대 99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화했다.

BoI는 “장기 임대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장기 자본, 첨단 기술, 글로벌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IRR은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행정적 안전장치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IRR은 임대 계약을 토지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공시된 임대 계약이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BoI는 또한 “IRR은 투자자의 절차를 단순화하여 준수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히 안내하고, 정부 기관이 신청을 처리할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관료적 마찰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BCDA)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서명을 환영하며, 새 규정 시행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고, 장기 계획 수립이 용이해지며, BCDA 개발 지역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일자리, 인프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BCDA는 또한, 이 법은 9월 3일 서명되었으며, 투자 촉진 기관이 투자자와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새 규제 프레임워크는 12월 20일 공포 후 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2/25/721023/investments-board-signs-lease-act-irr/>



11월 무역적자 증가 가능성

December 25,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This photo shows crates carried by a forklift in the port of Manila.

STAR / File

필리핀 마닐라 — 영국 소재 싱크탱크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에 따르면, 필리핀은 11월 수출 성장 둔화와 수입 감소가 계속되면서 무역적자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신흥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 미겔 찬코(Miguel Chanco)와 아시아 경제학자 미키타 굽타(Meekita Gupta)는 보고서에서, 11월 무역적자가 10월의 38억 3천만 달러에서 39억 5천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이 배경에는 전년 대비 수출 성장률이 19.4%에서 13.5%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61억 9천만 달러에서 19.4% 증가한 7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이 무역 파트너에게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수출은 10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미국은 필리핀 수출품에 대해 반도체와 주요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에 19%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찬코와 굽타는 11월 수입 감소율이 이전 달 6.5%에서 2.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10월에 112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20억 달러보다 6.5% 감소한 수치다.

1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의 무역적자는 413억 2천만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의 452억 5천만 달러보다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필리핀 수출은 전년 동기 619억 달러에서 13.8% 증가한 70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총 수입액도 전년 동기 1,071억 5천만 달러에서 4.3% 증가한 1,117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은 오늘 11월 국제 무역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2/26/2496734/trade-gap-likely-november](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2/26/2496734/trade-gap-likely-november)

재무부, 납세증명서(LoA) 발급 권한 있는 국세청(BIR) 사무소 제한 가능성

December 23,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프레드릭 D. 고(Frederick D. Go)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세무 감사 과정의 남용 의혹에 따라 납세증명서(LoA, Letters of Authority)를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BIR) 사무소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장관은 1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LoA를 발급할 수 있는 부서가 많다. 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무부(DoF)에 따르면, 세무 감사 과정의 잠재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LoA와 감사 명령(mission orders)은 위원장(Charlito Martin R. Mendoza) 또는 부위원장만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무부(DoF)에 따르면, 현재 LoA를 발급할 수 있는 사무소는 총 네 곳이며, 현재 계획은 평가부(Assessment Division)와 부가가치세(VAT) 감사 부서의 발급 권한을 통합하는 것이다.

고 장관은 “기업이 조사를 받을 경우, VAT 조사와 소득세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기보다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 당국이 감사 과정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동안 현장 감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감사를 시작하려면 LoA와 감사 명령(mission orders)이 필요하다. 기업 단체와 입법자들은 감사가 갈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FREDERICK D. GO —
DEPARTMENT OF FINANCE

[Cont. page 7]

재무부, 납세증명서(LoA) 발급 권한 있는 국세청(BIR) 사무소 제한 가능성 [Cont. from page 6]

12월 11일, 국세청(BIR)은 세무 감사를 위한 LoA 발급을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며, 모든 발급은 멘도자(Mr. Mendoz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장관은 또한 정부가 LoA 발급 빈도를 연 1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급된 LoA에 대한 중앙 집중형 디지털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u-Baladad & Associates의 창립 파트너이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베네딕타 두-발라다드(Benedicta Du-Baladad)는 세무 감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계획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그녀는 Viber를 통해 “그와 더불어, 감사 대상 납세자의 선정은 수작업이 아닌 시스템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간 감사 가능한 납세자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발라다드는 또한 국세청이 조사 사무소와 현장 담당자의 납세자 선정 권한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발급된 감사 계획에서 벗어날 재량권은 정당한 상황에서만 위원장(Commissioner)에게만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2/23/720758/dof-could-limit-bir-offices-authorized-to-issue-loas/>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 Inc.**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ree, Salcedo Village, Makati City
Tel No.: (632) 8885-7342
E-mail: info@kccp.ph
Website: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2024, SGV Korea & Co., All Rights Reserved.

How will business move faster to slow climate change?

It will take busines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to reverse climate change.

Find out how SGV can help you reframe the future to create
a better, more sustainable working world.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